



지난해 4월 불의 화재 사고를 당한 양양 낙산사는 사찰 복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비록 '사고'에 의한 미정수이지만 불교계에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 문화재 관람료 없어져야 한국불교가 산다?

지난해 4월 불의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된 양양 낙산사의 복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88억원에 달하는 복원비를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와 관리 비용으로 징수되는 것인데, 또다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수백억에 달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정확한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낙산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계 안팎에서 언제든 논란이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최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합동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란 점검에 이어 문화재 관람료 문제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 #자급자족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이와 같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관한 여론에서 또 눈여겨 볼 대목은 관람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안이 있다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보전해준다면 폐지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승가대 교수 분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불교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문화재 관람료를 당분간 보전해주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각 스님은 또 "포교를 해야 불교가 산다"며 "현재와 같은 체제에 안주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조계종이 요청을 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를 주장해왔던 문화연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 사용 투명화를 위한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제기가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불교계 미래를 위해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대안을 준비할 때다.

기획취재팀=한명우·노병철·유철주 기자

## 공원입장료와 합동징수로 일반인들 불만 고조 관람료 의존 포교·수행 소홀 우려... 자생력 저하 폐지 반대 불교계 인사들도 "대안만 있다면 찬성"

- 1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앞과 뒤
- 2 문화재 관람료, 어떻게 할 것인가?

**#1962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시작된 시기는 1962년이다. 팔만대장경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해인사에서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에 도입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보다 8년이나 앞서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제도는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에 비해 문화재 관리와 보수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①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문화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가

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요금 징수는 당연하다"면서도 "불교문화재의 경우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해당사찰이기 때문에 관람료 문제에 있어서 일반문화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사용자 불투명**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왜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도 합동징수 형식으로 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강제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사찰을 들르지 않는 입장객으로서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마치 불경을 사지도 않고 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징수 당한 관람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 일반 국민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입장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두무몽술한 답변만을 내놓았었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문화재 보수가 국고 보조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의 원인이 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조계종 문화재 관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수백억에 달한다. 2006년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2000여억원 중 236억이 넘는 돈이 조계종 문화재 보수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교계의 자생력 실종을 근거로 꼽는다. 조계종 주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면서 포교와 수행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신도운동50년 평가와 올바른 신도상 정립' 포교정책연찬회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박희승 차장은 "문화재 관람료에 의지하여 사찰을 유지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스님들이 신도 교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계 여론주도층의 생각은?**  
이러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에 대해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의 생각은 어떻게? 본지가 출·재가 인사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결과 42.3%인 22명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찬성 입장을 보였고 57.7%인 30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할 만한 점은 재가자 27명 중 20명은 폐지를 찬성한 반면, 출가자 25명 중 23명이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한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만 기다리고 있다는 스스로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불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아카데미 윤현수 이사장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람료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경우 사찰에 가만 시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찰입구에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관리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를 반대하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문화재보호법에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찰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를 여론

에 휩쓸려 폐지하자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부천대 철학과 김광식 교수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징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찰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관람료 징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20개 사찰을 대상으로 폐지 여론을 살펴본 결과 관람료 수입이 많은 절입수록 폐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 문화재 관람료 관련 설문 명단

- 스님(25명)  
동선(조계종 기획실장), 정만(조계종 재무부장),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일관(조계종 포교부장), 정범(월정사 주지), 철안(마곡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법타(은혜사 주지), 영조(송광사 주지), 몸산(대흥사 주지), 철안(봉선사 주지), 일면(군중교구 주지), 법산(동국대 교수), 분각(중앙승가대 교수), 의연(중앙총회 의원), 중훈(중앙총회 의원), 초격(중앙총회 의원), 장적(중앙총회 의원), 지홍(불광사 회주), 장곡(갑사 주지), 현각(성불원 원장), 세영(신복사 주지), 금강(미항사 주지), 동출(설법연구원 원장)
- 재가불자(27명)  
임원숙(前 교사불자연합회장), 최영준(대한불교청년연합회), 윤창화(민족사 대표), 김광식(부천대 교수), 공명수(부산불교신도회장), 허통(감정평가사불자회장), 박경준(동국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교수), 송도근(건국불자회장), 남지심(소설가), 김종두(경향신문불자회장), 김익석(대불청회장), 황진수(한성대 교수), 김용표(교수불자연합회장), 박노영(공인회계사불자회장), 권준희(광동중 교부사), 김재일(동산반이회 회장), 이택수(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식(한국불교청년연합회장), 김윤복(부산불교실업인회 회장), 윤전수(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정영조(한국불교연구원장), 신보라(대불연 회장), 박광서(재가인대 상임대표), 김의경(중앙신도회장), 김영주(해인사 중무실장)

(무순)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윤,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변명함란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변명함란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즐거우며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인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2월 27일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